

민주 '오세훈 때리기'... 내년 선거 서울 탈환 총공세

명태균 여론조사 파일 앞세워 '위선자' 작심 공격 "비용 대납한 게 사실이면 당선 자체가 원천 무효" 중요 앞 난개발·한강버스 사고 등 졸속 시정도 맹공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때리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건희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휴대전화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올렸다.

민주당 3대특검총합대응특위(위원장 전현희)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은 새빨간 거짓말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덮으려는 오 시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김건희특검이 오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6건을 확인했음에도 오 시장은 '카톡을 잘 안 본다'는 유제이탈 변명만 늘어놓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는 오 시장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오 시장은 더러운 위선의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오 시장을 지목하는 결정적 단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자신에게 4차례 전화해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2000만 원을 빌려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김 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도 특검 수사로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거짓말로 대충 넘어갈 가 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명태균 여론조사 등을 업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선 자체가 불법이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오 시장의 범죄 정황이 뚜렷해진 만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서울시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총합대응특위(위원장 전현희) 위원과 소속 의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겨냥했다.

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작금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영어를 몰라서, 카톡을 잘 안 봐서, 오 시장 측의 안드로메다급 황당 변명이기가 막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중요 개발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보낸 고충 건물 개발 계획을 우려하는 외교 문서에 대해 문자 '영어 원문이 라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

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무책임과 무성정의 극치를 달리는 오 시장 측의 안드로메다급 유제이탈 화법만 봐도 왜 오 시장이 10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정을 맡으면 안 되는지 그 자격 미달 사유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은 전이행정과 치적 쌓기에 몰두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눈독 들이기보다 불법에 기대어 서울시장으로 당선했다는 혐의부터 명확히 소명하고 수사부터 뚜렷하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한강버스 관련 문제점을 언급하며 "오 시장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경미한 잔고장'으로 폄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강 위에서 시민이 뒹구는 채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이를 가버운 문제로 치부하는 오 시장의 현실 인식 자체가 더 큰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졸속 행정을 지속하려는 오 시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비판 여론 고조... 암벌 촉구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변호인들에 대한 암벌을 촉구했고, 전대협 법원청정처장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이들 감치과정에서 드러난 법집행 절차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희상·권우현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결국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모욕적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호인 중 한 명인 이희상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 X의 XX 죽여, 이거, 빛도 아닌 XX인데, 엄정 위세를 떨더라고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원행정처가 두 사람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대한변협 등에 통보했고, 해당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내란 세력, 내란 음모 세력 등이 법정 모욕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남았다"고 지적했다.

전수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끝내 선을 넘었다"며 "감치 선고를 받고도 반성이 없고,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모욕을 퍼붓고, 이제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車관세 11월1일자 소급 적용

한미 MOU 후속 조치...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전략투자기금 설치... 美 상무장관에 서한 송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별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업무협약(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의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략적 투자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2026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추적 구조로 이뤄진다.

또한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사업에 상 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 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제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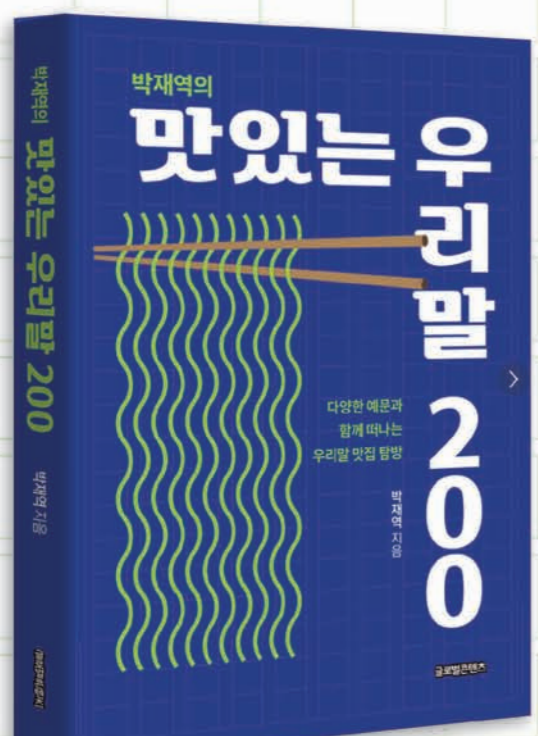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동 서한을 통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오늘(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됐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박재욱 지음 | 272쪽 | 17,000원 | 글로벌콘텐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즐기는 우리말!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흥미를 더하다

맛있는 우리말 200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답변을 내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언어를 주제 삼아 우리말 어법을 넘나들며 두서없이 우리말 산책을 떠나보려고 나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글이지만 누구나 다 잘 쓸 수는 없는 게 또한 글이다. 잘 쓴 글은 읽는 이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래서 글은 마음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써서 감동을 주는 글이라 해도 기본 어법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면 결코 잘 쓴 글이라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글에도 품격인 '문격(文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